

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- 검토 보고 -

□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군세조례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받거나 부과지 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일자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단축조정
(안 제22조의2제3항)
-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,000분의 115에서 1,000분의 120으로 인상함. (안 제40조의3제1항)
- 읍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하고, 군내의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51조제1항)
-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1일부터 7월 10일에서 7월1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 조정(안 제98조제2항)

□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3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
- 충청남도 세정13400-2209(2002.12.27)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및 시·군세조례개정내용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부과고지의 경우 단축 조정하고, 교통세액의 인상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연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서
-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및 부과고지를 15일 단축 조정함으로서 행정오류 방지와 세무행정의 원활한 세제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,
- 교통세액을 0.5% 인상함으로서 운수업체(버스, 택시, 화물 등)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됨으로 인하여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,
- 농업소득세의 감소에 따라 읍·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인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이 제고될 것이며,
- 또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연장조정 함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